5·18 33주년 경찰 경비 초비상

‘임을 위한 행진곡’ 대체곡 제정 문제 반발 확산

정치적 이슈 부각 노동계·대학생들 집결 예고도

올해 5·18 광주민중항쟁 3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경찰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 출범 첫해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통상 대통령이 참석해온 점 등을 감안해 경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5·18 민중항쟁 추모곡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각종 사회 현안 이슈를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에 맞춰 부각시키려는 노동계 움직임도 감지되면서다.

기념식이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낀 연휴에 치러지면서 노동자·대학생들의 단체 방문 행렬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사태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5·18 33주년 기념식을 위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안팎에 40~50개 중대(2800~3500명)를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1년과 지난해엔 고작 7개~10개 중대(490명~700명) 병력만 배치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병력 투입 계획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경찰은 기념식까지는 보름 가량 남았지만 지난 3일 국립 5·18 민주묘지 안팎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경찰은 10일 최종 경비대책을 마련한 뒤 15일 광주경찰청에서 경비대책 보고회를 열어 세부 계획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경비 대책을 크게 강화한 데는 예년과 다른 긴장감이 감지되면서다.

당장, 올해 5·18 기념식이 휴무일(17일~18일)과 겹치면서 각종 사회 현안 문제와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노동계·대학생들이 대거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제주 강정마을 주민·용산참사 유가족 등 관련자들이 5·18 3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점도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기념식인 만큼 대통령 참석 행사로 치러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5·18 기념식 대체 추모곡 제정에 대한 국민 반발이 잦아들기는 커녕,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자칫 돌발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3년 5·18 24주년 기념식에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를 점검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 경호차가 한때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패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직위해제 됐다.

한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3년째인 2000년 5·18 기념식에 첫 참석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5년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8년에 참석한 뒤 4년간 불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돼야 강운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5·18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5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 공식 식순에 포함되어 제창될 수 있도록 강력 대처키로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어린이날 행사 다채

휴일 사건·사고 얼룩도

5월 첫째 주 주말과 휴일인 4일과 5일 광주·전남지역에선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립박물관은 5일 북구 용봉동 시립박물관 일대에서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와 말 타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은 이날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가족사랑 꿈나무 꾸미기·야생화 및 야생동물 발 도장 찍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여수해경도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여수시 봉산동 해경부두에서 경비함정을 공개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공원·유원지엔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5일 오후 4시10분께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앞 1km 해상을 지나던 2792t급 화물선 ‘현대당진호’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여수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에는 순천시 별량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오엔 화순군 청풍면 농로에서 김모(75)씨가 몰던 경운기가 수로에 빠져 함께 타고 있던 김씨의 아내(66)가 숨졌다. 앞서 지난 4일 밤 10시50분께엔 무안군 삼향읍 한 폐기물 처리장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면적 140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서구청 공무원 올들어 3명 숨져

업무스트레스·신병 비관한 듯

광주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실적·성과 위주의 행정처리가 원인이라며 정확한 진상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오께 광주시 남구 양과동 한 야산에서 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오모(40)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씨는 지난 29일 가족들로부터 가출신고된 상태였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지난 1월부터 회계과로 발령이 나 관급 계약 업무를 담당한 뒤부터 가족에게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 지난 30일자로 상무 1동 전보를 앞둔 상태였다.

앞서 지난 1월10일 새벽 4시께 경제과 소속 유모(46·7급)씨가 광산구 장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는 이전 부서에서 과도한 업무를 소화하는 와중에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에는 건설재난관리과 소속 최모(59)과장이 예산집행과 민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지병이 악화돼 숨지기도 했다.

서구청 공무원 노조는 “성과와 실적 위주의 근무 환경이 이 같은 비극을 만들어냈다”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8809〉 김종두

거액 리베이트 의혹

檢, 대형병원 3곳 수사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형사2부장)은 기부금 형식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대형병원들 중 3곳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전담수사반의 수사 대상이 된 대학병원은 고대안암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인제백병원 등 3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세브란스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서울보훈청, ‘5·18 수상작’ 교체 요구 논란

보훈청측 “사업회에 의견 전달한 것일 뿐” 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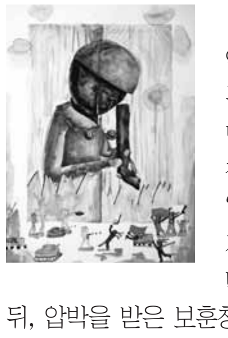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이하 5·18 서울사업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공모전 수상작을 서울지방보훈청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교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5·18 서울사업회는 5일 자료를 내고 ‘5·18 기념 제9회 서울청소년대회’ 서울보훈청장상 수상작 9편 중 2편에 대해 서울보훈청 측이 교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훈청측이 교체를 요구한 작품은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1점〈사진〉과 중학생이 쓴 시 1점으로, 지난 1일 상장 발급을 위해 수상작 사본을 받아본 뒤 유선상으로 ‘5·18 정신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보훈청은 지난 1980년 5월21일 당시 군인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모습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시 부문 수상작인 ‘5월의 봄나무’는 5월의 봄 풍경을 그리며 5·18을 노래한 작품으로, 자연의 모습을 ‘피냄새’, ‘총성’등의 단어를 통해 이입한 것을 문제삼았다는 게 5·18 서울사업회 측의 설명이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시민들의 모습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5월 정신’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5·18 서울사업회 김용만 사무총장은 “지난해 서울보훈청장상을 받은 ‘29만원 할아버지’가 사회적 반향을 얻은 뒤, 압박을 받은 보훈청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사업회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교체를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DJ 강제연행 저지 5·18 시위와 관련 없어”

광주지법, 보상 기각 취소 각하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5일 방모(65)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결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고 구금돼 5·18 관련자에 해당한다”는 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 연행을 저지한 행위가 당시 학생,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시위와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방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일씨의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1980년 5월 17일 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김 전 대통령을 강제로 연행하는 계엄군을 저지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며 5·18 관련 보상을 신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직원 성폭행한 못된 사장님

쌍나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50대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경찰서행.

○…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6)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경리직 A(여·27)씨를 강간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김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강제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 /박정렬기자 halo@